

상생뉴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Rail Network 실현

/ 발행인 강영일 / 편집인 신철수 / 기사문의 042)607-3085 / http://www.kr.or.kr /

철도공단, 「수도권고속철도 안전운행 협의회」개최

- 운영자인 수서고속철도(주)와 협의회를 통해 원활한 개통 및 철도안전 협력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이수형)는 4월7일(화) 수도권고속철도의 원활한 개통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대전 본사에서 공단 시설사업본부장, 수서고속철도(주) 영업본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고속철도 안전운행 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철도공단은 '정부 3.0'의 소통과 협력의 일환으로 수서고속철도(주)와의 협업을 통해 건설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반영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 협의회를 개최했다.

철도공단은 이날 협의회를 통해 수서역 매표창구 및 화장실 추가설치, 광주 승무센터 확보, 수서주박기지 사무공간 확대 등에 협조하기로 하고, 앞으로 개통 전 까지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이용자 중심의 시설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 보완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고속철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고속철도는 수서역을 기종점으로 부산, 목포를 운행하기 위해 총 사업비 3조 1,197억 원을 투입해 수서-동탄-평택(61.08km)을 잇는 사업으로 2011년 5월 공사를 착공해 2016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68%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협의회 개최 사진



철도공단의 '우수 설계검토 노하우(사례)'를 공유합니다!

- '14년 VE·설계심사 우수사례를 내용으로 '사례집' 발간 -

KR연구원(원장 이동렬)은 공단에서 2014년 시행한 설계VE·심사결과 중 우수사례를 정리해 '2014년 VE·설계심사 사례집'을 발간하고, 4월6일(월)부터 공단 홈페이지(www.kr.or.kr)를 통해 게시해, 누구나 공단의 심사 노하우를 볼 수 있도록 공유했다고 밝혔다.

* VE(Value Engineering) : LCC(Life Cycle Cost)를 고려한 최상의 가치창출 기법
* 설계심사 : 설계 성과물의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절차

'2014년 VE·설계심사 사례집'에는 ▲공사용 강재교량의 길이축소(552m→500m), ▲철도선로를 횡단하는 구조물 변경(교량→지하Box), ▲배전용 트러프 재질 변경(합성수지계열→콘크리트), ▲변전소 외곽감시방식 개선(케이블 방식→움직임 감지방식)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사업비 절감 뿐 아니라 품질향상 관련 각종 설계검토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사례집을 공단의 협력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와 파일형태로 배포할 계획으로, 설계성과물의 질적 향상 및 설계사 업무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철도공단 KR연구원은 2014년 한 해 동안 182건의 철도건설공사 설계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 718명이 참여, 180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총 5천920여건의 설계개선 제안사항을 발굴·개선하여 설계품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4천695억원의 철도건설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었다.

2014년 VE·설계심사 사례집



한국철도시설공단, 불공정관행 뿌리 뽑는다

- 공공(公共)·민간(民間) 합동 T/F 구성 및 1차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본부장 박인서)는 지난 3.26일 공공·민간 합동으로 '불공정관행개선팀(T/F)'을 구성하고,

* 민간협회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eng협회

4.2일(목) 오후 3시, 1차 불공정관행 개선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조건 및 부당특약 등 9건의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개선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금번회의에서 공단과 철도관련 협회(4개)는 예가산정 부적절, 적정공사비 미확보, 자재검수 경비의 전가,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특약요구) 및 재설계 비용 미지급 등 건설현장 전반의 불공정관행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잡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단은 제기된 불공정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즉각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철도 건설현장의 생생한 불공정 실태파악을 통해 개선과제를 지속발굴하여, '15. 6까지 집중개선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금번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해 공공·민간이 상생·협력하여 철도건설 산업에 공정경쟁 문화를 정착하고,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좋은기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건설현장의 대표적 불공정관행 개선과제 (9건)

- ① 예가 산정기준(100%-5%) 부적절 등 적정 공사비 확보대책
- ② 신규비목 등의 협의를 적용방안 개선
-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요율 이하로 적용 등 실태 개선
- ④ 자재 제작공장 검수비용·경비 미반영 또는 시공사에 부담
- ⑤ 현장 가설사무소, 상황판 등 적정 규모로 설치 필요
- ⑥ 공사·자재대금의 End-user까지 흐름 철저한 감시대책 마련
- ⑦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및 부당한 특약 체결 강요
- ⑧ 기본 및 실시설계 구분발주 필요 등 적정 설계비 확보대책
- ⑨ 설계기준 변경시, 재설계에 따른 추가 설계비 적정 지급

투명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당업자 즉시 조치

- 입찰 시 허위서류 제출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행 -

경영지원실(실장 이명환)은 입찰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주)한국코아엔지니어링」에 대해 지난 3월27일(금)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제한 3개월의 행정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공단에서 작성한 문서를 위조해 실적증명서 발급기관인 한국전기기술협회에 신고하고, 위조된 문서로 발급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 확인서'를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전철전력설비 신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입찰참가 시 제출하였으나, 공단의 입찰서류 심사과정에서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해당 업체는 2015년 4월 3일 부터 3개월간 공단을 비롯한 전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경영지원실 관계자는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공정한 계약질서를 문란케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역업체 의무참여 공사' 확대 시행

-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 기준금액 8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확대 적용 -

경영지원실(실장 이명환)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 기준금액을 기존 8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확대하여 4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해당 지역업체에게 계약금액의 30%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함으로, 공단의 기존 기준금액인 82억원을 적용할 경우, 금년에 7건 1천177억원 중 353억원이 지역업체의 몫이었으나, 변경된 기준금액인 245억원을 적용할 경우에는 42건 3천587억원 중 1천076억원이 지역업체에게 돌아갈 수 있다.

경영지원실 관계자는 "금번 기준금액 확대 적용을 통해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경기 활성화는 물론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 이라 전했다.